

# 시험대 오른 송영길 리더십... 과제는 내홍극복·대선원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내홍 격화  
송 대표 편파성 논란 휩싸이기도  
당원·지지자 등 결집 최우선 과제  
원팀 통합 선대위 구성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후 '내홍'이 심상치 않다.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와 당원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말과 행동을 한껏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도 미미하다.

이로 인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송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라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당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추가됐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파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송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의 도움을 받았고,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시스

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대표에게는 먼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최소화해 정권재창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에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송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송 대표도 확고한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캠프 측에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진행한다면 송 대표로서는 갈등

봉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익명의 민주당원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보인 건 맞지 않나"라며 "지금 벌어지는 화천대유 건과 이번 경선 결과 사사오입 사표 논란을 오히려 지도부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승복 선언과 관련해서도 왜 자꾸 승복 선언하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먼저 풀어줘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지자들은 다르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전혀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한다고 생각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선 본선을 위해 '원팀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문제다. 송 대표는 통합 선대위 구성을 위해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에게 주문했다. 통상 선대위원장으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당 대 당으로 맞붙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큰 틀의 선대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낙연·주미애·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팀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쉬운 선거는 없지만 결국 야당 후보와 일대일로 경쟁했을 때 원팀으로 당의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라 합쳐도 쉽지 않은데 내부의 갈등은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 선언 없이 선대위 구성은 시가지조라는 반응도 존재한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이후 침거 중인 상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이의신청에 힘을 쏟는 상황에 이들이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 선대위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 선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원팀을 위해 이낙연 후보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의 반응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송 대표와 당 지도부도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팀 통합 선대위 구성을 위해 고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통합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캠프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진 않는다"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자 캠프에서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민주정부 4기 출범을 위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이재명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 고려"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계획 밝혀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선택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의 경기도지사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퇴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현안사항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기도지사로서의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속고를 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정치공세가 예상되나 오히려 구체적 내용과 행정적 성과, 실적 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 판단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지사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버리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박정익 기자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충돌'

법사위 국정감사

野 "수임자료 제출하라" 요구  
與 "국회 권한 밖, 적절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2년여 간 공직선거법 재판 등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에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친문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이사 자리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무죄를 받을 때 있었던 주요 변호사"라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2에 따르면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간사(여당)와 협의를 먼저 하라"며 "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간사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 제기 내용도 터무니 없다"며 "고발의 근거가 짜리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게 재반박하며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정감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대장동 특검' 요구에 文 "검경 철저히 수사"

'대장동 의혹' 관련 첫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검·경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자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시점에 '검·경 수사'에 대해 지시한 배경과 관련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합동수사본부나 특검 논의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검·경에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라는 문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